

제2차 금융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성주·민병덕·박주민·신동근·양경숙·오기형·이동주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 ■ 목적

-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위기 극복’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토론회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 모색
- ✓ 연속토론회(8회), 매회 세미나 결과 언론브리핑, 원내 정책·입법과제 제안 등

### ■ 행사 개요

- 시 기 : 2023년 3월 08일(수)~4월 26일(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코로나 확산 시 온라인 화상회의만 진행)
- 행사명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 주 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주 관 : 매회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명단 아래 참조)
- 참 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 ■ 운영 방향

- 국회의원(책임의원) 좌장·토론자로,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전문가를 발제·토론자로 섭외
- 사전에 관련 민생의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 리스트 정리
- 연속토론회 진행 후 제안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추진 등 실사구시적 운영
- 참여 의원이 많을 경우 금융, 노동, 주거, 공정경제 등 분야별 분과 구성 및 운영

### ■ 진행 방식

- 진행 방식
  - 매회 각 분야별 좌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달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토론회의 책임성 확보

- 분과별(과제별) 책임의원 사전 모집(총 39명)

- (총 론) 박주민(좌장), 김영배(간사/토론), 민병덕, 우원식, 정태호, 홍기원 국회의원
- (금 융) 박주민(좌장), 민병덕(간사/토론), 김성주, 신동근, 양경숙, 오기형, 이동주 국회의원
- (주거·부동산) 전해숙(좌장), 조오섭(간사/토론), 박상혁, 서동용, 윤준병, 이수진(지), 홍기원 국회의원
- (중소기업) 정태호(좌장), 김경만(간사/토론), 김교흥, 김한정,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국회의원
- (소상공인) 서영교(좌장), 이동주(간사/토론), 김경만, 김주영, 민병덕, 박주민, 윤영덕 국회의원
- (노동 고용1) 이학영(좌장), 이수진(비)(간사/토론), 여기구, 최인호 국회의원
- (노동 고용2) 홍익표(좌장), 유정주(간사/토론), 김승원, 소병훈 국회의원
- (노동 고용3) 남인순(좌장), 최혜영(간사/토론), 권인숙, 서영석 국회의원

- 토론회 진행 프로세스

토론회 전	토론회	토론회 후	최종
국회의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과제 논의 및 방향 설정 간담회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 및 토론	⇒ 매회 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 토론회 결과 정책위 등 전달 및 과제 수행

○ 진 행 : 3.8.(수) ~ 4.26.(수), 주 1회(수요일), 14:00~16:00(120분), 총 8회

- (1~4차) 매회 주제발표 50분(2인), 지정토론 45분(3인), 청중토론 20분(자유토론)
- (5~8차) 매회 주제발표 30분(1인), 지정토론 60분(4인), 청중토론 25분(자유토론)
- 매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과정에 참여
- 유튜브 동시 생중계 : 텔레민주 TV 등

○ 결과물 활용 방안

- 매회 토론회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 토론회 직후(16:30), 동일 장소 또는 소통관
  - 언론브리핑 현장에 각 분과 책임의원 전원 + 박주민, 정태호 국회의원 참석
  - 언론브리핑 내용 정리한 보고서 발간 : '민생회복 00대 과제' (5월 초)
-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제안(5월 중순)을 통해 입법 추진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공정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제언
  - 2024년 제22대 총선 민생·공정경제 관련 공약 제언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기간 : 2023. 3월 ~ 4월(총8회)

○ 주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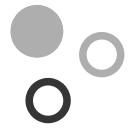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1회 (총론)	2023.3.08.(수) 14:00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li> <li>◦ 내용: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국제 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진단,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회복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방향 모색</li> <li>◦ 좌 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li> <li>◦ 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li> <li>◦ 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li> <li>◦ 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li> <li>◦ 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2회 (금융)	2023.3.15.(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b></li> <li>◦ 내용: 자영업자, 영끌세대, 서민에 대한 채무상당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채무자 지원행정, 채무자의 채무조정 상담 및 재기지원(업종·직업전환, 재창업 등)</li> <li>◦ 좌 장: <b>박주민</b>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제1: <b>남국현</b>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 발제2: <b>김남주</b>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li> <li>◦ 토론1: <b>박정만</b>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li> <li>◦ 토론2: <b>차남수</b>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li> <li>◦ 토론3: <b>민병덕</b>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3회 (주거·부동산)	2023.3.22.(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li> <li>◦ 내용: 무주택 세입자 피해구제(전세사기 피해, 경매단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경락대금 세입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매입임대 확대 등 임대지원 강화)</li> <li>◦ 좌 장: 전해숙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제1: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 발제2: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li> <li>◦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li> <li>◦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li> <li>◦ 토론3: 권지웅 前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li> <li>◦ 토론4: 조오섭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4회 (중소기업)	2023.3.29.(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li> <li>◦ 내용: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기후·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협회의 단체교섭권, 원재료 공급가격 사전예고제, 정의로운 업종·직업전환 지원 등</li> <li>◦ 좌 장: 정태호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제1: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li> <li>◦ 발제2: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론1: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li> <li>◦ 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론3: 김경만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5회 (소상공인)	2023.4.05.(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피해 위기 극복 방안</li> <li>◦ 내용: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li> <li>◦ 좌 장: 서영교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 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변호사</li> <li>◦ 토론1: 정종열 전국가맹점주단체협의회 자문위원장</li> <li>◦ 토론2: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li> <li>◦ 토론3: 김현성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前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li> <li>◦ 토론4: 이동주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제6회 (노동·고용) ①	2023.4.12.(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li> <li>◦ 내용: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li> <li>◦ 좌 장: 이학영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 제: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li> <li>◦ 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li> <li>◦ 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li> <li>◦ 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책임의원)</li> </ul>
제7회 (노동·고용) ②	2023.4.19.(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 위기 극복 방안</li> <li>◦ 내용: 웹툰작가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태조사 보고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모색, 콘텐츠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위한 제도 논의, 문화예술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등</li> <li>◦ 좌 장: 홍익표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제1: 김종휘 변호사 / 前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li> <li>◦ 발제2: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li> <li>◦ 토론1: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 변호사</li> <li>◦ 토론2: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li> <li>◦ 토론3: 유정주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8회 (노동·고용) ③	2023.4.2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와 극복 방안</li> <li>◦ 내용: 돌봄노동자의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li> <li>◦ 좌 장: 남인순 국회의원(책임의원)</li> <li>◦ 발 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li> <li>◦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li> <li>◦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li> <li>◦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li> <li>◦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책임의원)</li> </ul>



#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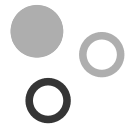
## ■ 개요

- 일 시 : 2023.3.15.(수) 14:0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
- 주 제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주 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 진행순서

시간		순서		주요 내용
~14:00		사전등록		
※진행사회 : 박정식 실장(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14:00~14:10	10분	사전행사		◦개회선언/국민의례/내·외빈 소개
14:10~14:15	5분	발제 및 토론	장내정리 인사말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
14:15~15:05	50분		발제	발제1 ◦주제: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발표: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주제: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위기 극복 방안 -발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15:05~15:50	45분		지정토론	◦주제: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장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발표: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
				◦주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 위기와 극복 방안 -발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15:55~16:00	10분	종합토론	◦주제: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발표: 민병덕 국회의원(책임의원)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 Contents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	i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iii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회 프로그램 .....	vii
◦ 목차 .....	viii

## ■ 발제문

1.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1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2.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위기 극복 방안 .....	17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 ■ 토론문

1.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33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	
2.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 위기와 극복 방안 .....	53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3.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63
민병덕 국회의원	

**발제 1**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남국현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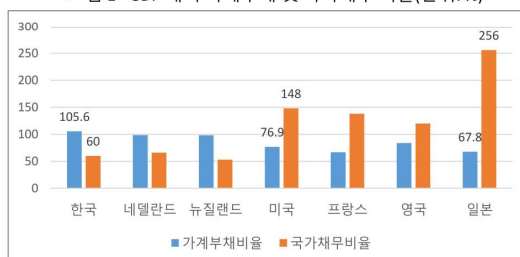


I. 제언배경	01
II. 가계부채 현황	03
1. 가계부채	
2. 자영업자 부채	
3.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III. 가계부채 분석	10
IV. 정책제언	18

## I. 제언배경

-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2년 3분기 1,871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6%로 세계 주요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음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인상으로 최근에 가계대출이 안정화되는 추세이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커서 상환능력에 우려가 제기됨
  - 취약차주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56만 6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24조 6억원에 달하고, 2조 3천억원이 연체
  -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계부채는 가장 높고, 정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18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수준으로  
정부의 가계지원이 부족하여 국가채무 비율이 낮음

<그림 1> GDP 대비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비율(단위: %)



자료: OECD

## I. 제언배경

○ 자영업자 대출은 22년 3분기 1,014조원으로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 14.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 13.8%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국은행은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 시 비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9%,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함
-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 본 고에서 금리인상의 충격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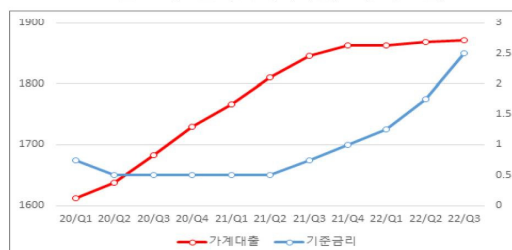
## II. 가계부채 현황

### 1. 가계부채

○ 기준금리와 가계대출의 변화

- 기준금리는 20년 5월 0.5%로 최저로 하락한 이후 23년 1월 3.5%로 급격히 상승함
  - 20년 코로나19 확대로 글로벌 경기둔화와 기업 및 가계지원 등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 최근 물가상승, 환율인상, 한미 기준금리 역전 등 우려로 10회에 걸쳐 기준금리 연속인상
- 가계대출은 20년 1분기 1,612조원에서 22년 3분기 1,871조원으로 16.1% 상승함
- 21년 4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화된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상승세가 감소한 것은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과 신용위험이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은 채무불이행이 우려됨

<그림 2> 기준금리 및 가계대출(단위: %, 조원)



자료: 한국은행

3

## Ⅱ.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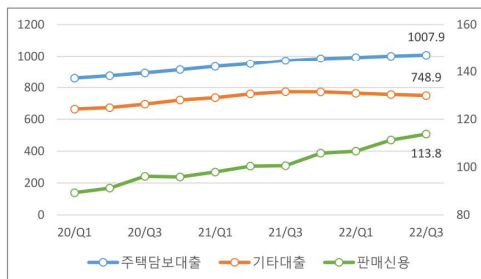
### ○ 가계대출 대출유형별 변동

- 주택담보대출은 21년 3분기까지 매분기 2%씩 증가 후, 대출금리 상승과 DSR 규제로 대출증가세가 둔화
- 기타대출은 21년 3분기 이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판매신용은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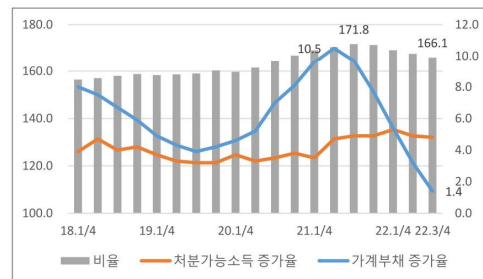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1년 3분기 171.7%에서 22년 3분기 166.1%로 5.7%p 감소
- 가계부채 증가율은 21년 2분기 10.5%를 정점으로 22년 3분기 1.4%로 감소

<그림 3> 가계대출 대출유형별 변동(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단위: %)



자료: 한국은행

4

## Ⅱ.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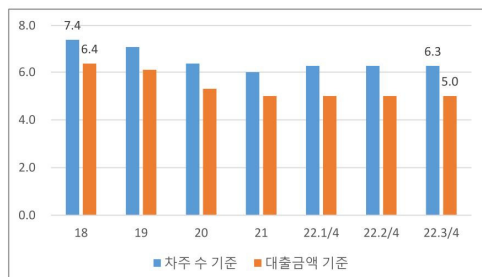
### ○ 취약차주 비중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이하)인 취약차주 수는 22년 3분기 전체의 6.3%
- 대출금액 기준으로 취약차주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 ○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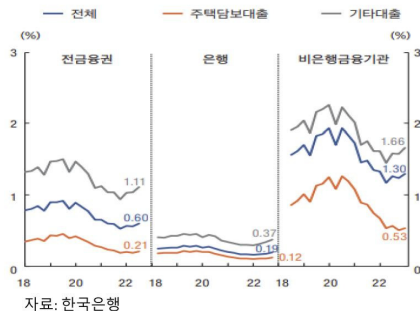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연체율은 22년 3분기 각각 0.12%, 0.37%로 낮은 수준임
- 비은행금융기관의 기타대출 연체율은 22년 3분기 1.66%로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높음

<그림 5> 취약차주 기준(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단위: %)



자료: 한국은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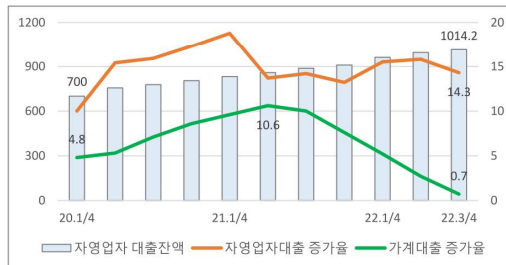
## Ⅱ. 가계부채 현황

### 2. 자영업자 부채

#### ○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증가율

- <그림 7>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20년 1/4분기 700조원에서 22년 3/4분기 1,014조원으로 44.9%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6.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22년 3/4분기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하였고, 20년 1/4분기 이후 증가율이 매분기 10% 이상을 나타내어 자영업자 대출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가계대출 증가율은 20년 1/4분기 4.8%에서 22년 1/4분기까지 10.6%로 계속 상승하였고,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2년 3/4 분기 0.7%로 안정화

<그림 7>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증가율(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6

## Ⅱ.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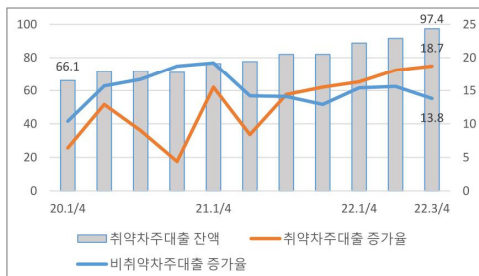
#### ○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

-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22년 3분기 97.4조원으로 20년 1분기에 비해 47.4% 증가
- 취약차주대출 증가율은 22년 3분기 18.7%로 비취약차주의 13.8%에 높고, 20년 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

#### ○ 금융업권별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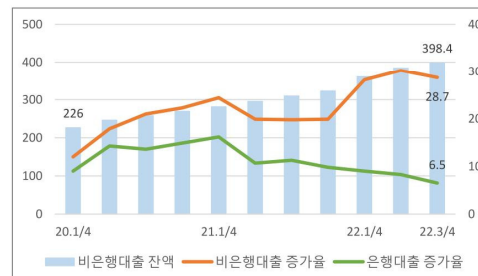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비은행대출 잔액은 22년 3분기 398.4조원으로 20년 1분기 대비 76.3% 증가
- 비은행대출 증가율은 22년 3분기 28.7%(전년 동기대비)로 은행대출 증가율 6.5%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

<그림 8>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그림 9>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단위: %, 조원)



자료: 한국은행

7

## II.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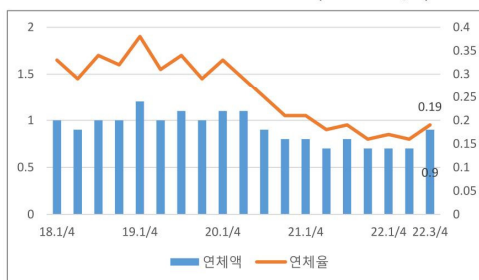
### ○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 대출 연체액은 22년 3분기 9천억원으로 코로나 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19%로 코로나 19이전에 비해 낮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조치의 결과임

### ○ 차주 특성별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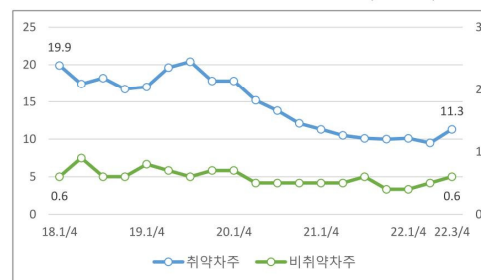
-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22년 3분기 11.3%로 18년 1분기 대비 8.6%p 감소
- 부실위험률은 연체와 세금체납이 있는 차주가 보유한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그림 10> 자영업자대출 연체율(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은행

8

## II. 가계부채 현황

### 3.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

#### ○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 부재

- 주택담보대출 대책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였고, 신용대출은 DSR 규제 외에 지원 대책 부재
-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대출 신청을 중단하였고, 이후 특례보증자리론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임
- 카드를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 자금유동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의 리볼빙서비스 급증
- 22년 리볼빙서비스는 7조 2천억 원으로 21년 대비 19.4% 증가

####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관리 정책의 실적 저조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까지 은행권의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시행하였으나, 실적이 저조
- 정부 당초 계획한 목표 금액 8조 5천억 원에 미달한 5.3천억원이 신청되어 실적이 저조함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적 저조
-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조 5천억 원 매입으로 목표액의 8.5%로 실적부진

####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예대금리차 관리대책에도 실효성이 미비

-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22년 11월 1.35%p에서 12월 1.34%p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23년 2월 1.63%p로 0.29%p 상승하여 정부의 예대금리차 관리대책이 효과가 없음

9

## Ⅲ. 가계부채 분석

### ○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2년 1분위 4.2배로 전년 보다 상승
- 고위험가구는 22년 1분위가 44.1%로 가장 높고,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위험 가구 증가
  - 22년 고위험가구 비율로 계산하면 전국 고위험 가구수는 3,271천 가구(전국 가구수 대비 15.2%)로 추산
-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고위험 가구 중 1분위가 97.8% → 162.2%로 64.4%p증가
  - 고금리로 인해 저소득층은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은 부채상환으로 상환액을 줄이고 있음

<표 1> 22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단위: 만원, 배)

구분	가처분소득	가계대출	가계대출/가처분소득		고위험가구* 비중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21년	22년	21년	22년	일반가구(부채있음)		고위험가구	
							21년	22년	21년	22년
1분위	1,191	4,958	4.0	4.2	45.8%	44.1%	47.1%	67.8%	97.8%	162.2%
2분위	2,591	7,194	2.8	2.8	32.5%	32.3%	36.8%	41.0%	92.3%	106.5%
3분위	4,187	10,216	2.4	2.4	25.6%	25.8%	32.4%	32.8%	94.2%	93.8%
4분위	6,326	13,753	2.2	2.2	22.7%	20.4%	32.9%	28.6%	107.4%	92.3%
5분위	11,578	24,831	2.2	2.1	19.2%	16.8%	29.4%	24.9%	107.7%	99.7%
전체	5,654	13,073	2.3	2.3	27.2%	26.0%	32.0%	29.7%	102.6%	100.5%

\*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자산대비 부채비율(DTA)이 100% 넘는 가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1, 22년)

10

## Ⅲ. 가계부채 분석

### ○ 연령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

- 가계대출은 40대가 14,990만원으로 가장 높고, 주택마련, 자녀양육 등 가계지출이 가장 높은 것이 원인임
  - 2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2.5배로 가장 높음
- 22년 고위험가구 비중은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20대 연령층에서 20.5% → 25.2%로 상승
  - 20대와 30대는 고위험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40대 이상은 고금리 부담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비중이 감소
-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고위험 가구에서 4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이 원리금상환액이 소폭 증가

<표 2> 연령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단위: 만원, 배)

구분	가처분소득	가계대출	가계대출/가처분소득		고위험가구* 비중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21년	22년	21년	22년	일반가구(부채있음)		고위험가구	
							21년	22년	21년	22년
20대	3,596	7,200	1.8	2.0	20.5%	25.2%	23.4%	21.8%	85.0%	67.8%
30대	5,484	12,987	2.4	2.4	26.7%	27.2%	33.8%	31.3%	110.0%	94.0%
40대	6,365	14,990	2.4	2.4	29.3%	26.2%	34.9%	31.8%	99.3%	103.8%
50대	6,667	13,752	2.1	2.1	27.4%	26.8%	31.2%	28.7%	105.6%	99.6%
60세 이상	4,679	11,836	2.5	2.5	26.2%	24.8%	29.2%	28.4%	99.3%	104.2%
전체	5,654	13,073	2.3	2.3	27.2%	26.0%	32.0%	29.7%	102.6%	100.5%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1, 22년)

11



## Ⅲ. 가계부채 분석

### ○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

-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년 1분위가 6.2배로 전년 보다 가장 높게 상승
- 고위험가구는 22년 1분위가 45.6%로 가장 높고, 저소득 자영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사정이 한계수준임
  - 고위험가구 비율로 계산하면 자영업자 고위험 가구수는 953천 가구(자영업자 전체 가구수 대비 20.0%)로 추산
-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고위험 가구 중 1분위가 109.9% → 167.5%로 57.6%p증가
  - 저소득 자영업자는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부채상환으로 상환액을 줄이고 있음

<표 3>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단위: 만원, 배)

구분	가처분소득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대출/가처분소득		고위험가구* 비중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21년	22년	21년	22년	일반가구(부채있음)		고위험가구	
							21년	22년	21년	22년
1분위	1,217	7,584	5.3	6.2	44.8%	45.6%	51.5%	69.8%	109.9%	167.5%
2분위	2,605	8,358	3.4	3.2	34.7%	34.9%	39.0%	47.0%	92.9%	116.3%
3분위	4,150	11,744	2.9	2.8	28.9%	29.0%	37.3%	37.5%	104.3%	104.2%
4분위	6,350	16,119	2.6	2.5	29.9%	27.7%	40.8%	31.4%	109.8%	81.0%
5분위	12,106	31,502	2.6	2.6	27.7%	22.5%	40.4%	31.5%	113.9%	118.6%
전체	6,044	16,477	2.8	2.7	31.3%	29.5%	40.0%	34.4%	108.7%	105.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1, 22년)

12

## Ⅲ. 가계부채 분석

### ○ 자영업자의 고용원유무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30,631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지출이 높은 편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년 3.7배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높음
- 고위험가구는 22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3.8%로 높고,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감소로 대출이 높은 편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위험 가구수는 각각 245천명, 630천명으로 추산
-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가 122.5% → 126.3%로 3.8%p증가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비중은 99.4% → 95.1%로 4.3%p감소

<표 4> 자영업자의 고용원유무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단위: 만원, 배)

구분	가처분소득	가계대출	가계대출/가처분소득		고위험가구 비중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21년	22년	21년	22년	일반가구(부채있음)		고위험가구	
							21년	22년	21년	22년
고용원있음	8,336	30,631	3.7	3.7	39.4%	33.8%	53.0%	38.2%	122.5%	126.3%
고용원없음	5,423	12,658	2.4	2.3	28.9%	27.9%	34.2%	32.3%	99.4%	95.1%
전체	6,095	16,807	2.8	2.8	31.4%	29.3%	40.6%	34.2%	109.3%	104.8%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1, 22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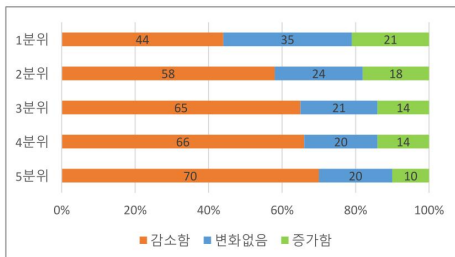


## Ⅲ. 가계부채 분석

### ○ 금융부채 변화 및 부채증가 원인

- 본 고는 고위험가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분위별 고위험가구를 추출하고, 가계부채 관련 설문결과를 분석함
- <그림 12>을 보면 1년 후 금융부채는 저소득계층에서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소득 1분위는 1년 후 금융부채는 '감소함' 44%, '변화없음' 35%, '증가함' 21%로 응답했고,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금융부채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표 5>에서 부채의 증가원인으로 저소득계층일수록 생활비, 부채상환이 가장 높고, 고소득일수록 사업자금, 주택마련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됨
-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 부채상환의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고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 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

<그림 12> 1년 후 금융부채 변화 전망(N: 2,347가구)



<표 5> 부채증가 원인(N: 371가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분위	생활비(45%)	부채상환(14%)	사업자금(11%)
2분위	생활비(29%)	사업자금(20%)	부채상환(13%)
3분위	생활비(32%)	사업자금(19%)	주택마련(15%)
4분위	주택마련(24%)	사업자금(23%)	생활비(15%)
5분위	부동산구입(21%)	사업자금(18%)	부채상환(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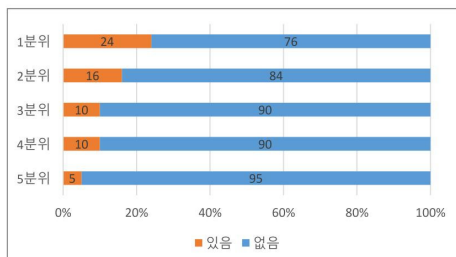
14

## Ⅲ. 가계부채 분석

### ○ 원리금 연체여부 및 부채증가 원인

- <그림 13>을 보면 원리금연체가 있는 가구는 소득 1분위에서 24%로 가장 높고,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원리금연체가 낮아짐
- 모든 소득분위에서 원리금연체가 있는 가구는 총 416천명이며, 대출잔액은 58.8조원으로 추산
- 원리금연체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연체사유에 관한 질문에서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감소가 가장 높은 원인으로 조사되어 이들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최근 높은 금리로 이자부담 상승, 고물가로 인한 가계지출증가, 자금용통차질 등 원리금연체사유로 조사

<그림 13> 원리금연체여부(N: 2,347가구)



<표 6> 원리금연체사유(N: 324가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분위	소득감소(36%)	이자부담상승(34%)	자금용통차질(12%)
2분위	소득감소(41%)	자금용통차질(24%)	이자부담상승(18%)
3분위	소득감소(30%)	이자부담상승(30%)	가계지출증가(15%)
4분위	소득감소(31%)	이자부담상승(22%)	자금용통차질(20%)
5분위	소득감소(29%)	자금용통차질(29%)	납부기일착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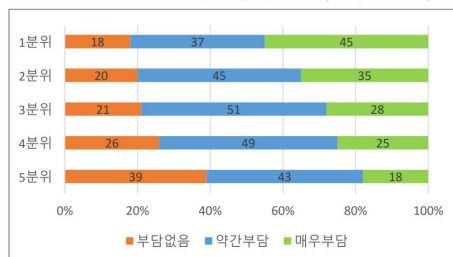
15

### Ⅲ. 가계부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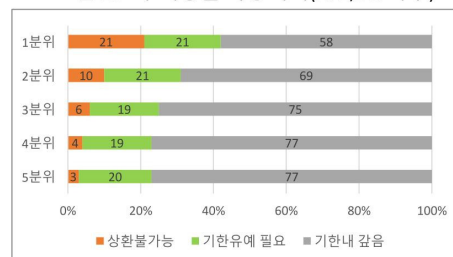
#### ○ 원리금상환의 생계부담 정도 및 부채상환 가능시기

- <그림 14>를 보면 원리금상환을 위한 생계부담이 소득 1분위에서 '매우부담' 45%, '약간부담' 37%로 전체 응답자의 82%가 생계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원리금상환의 생계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상환의 가능시기에 관한 질문에서 1분위의 21%가 '상환불가능', 21%가 '기한유예 필요'로 응답해 전체 42%가 부채상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1~5분위에서 '기한유예 필요'와 '상환불가능'로 응답한 가구를 전국 가구수로 환산하면 총 905천 가구로 전국 고위험 가구수의 27.7%에 해당하고, 이들 부채위기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림 14> 원리금상환 생계부담 정도(N: 2,347가구)



<그림 15> 부채상환 가능시기(N: 2,347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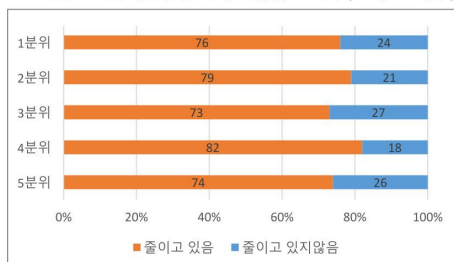
16

### Ⅲ. 가계부채 분석

#### ○ 원리금상환의 가계지출의 감소 및 가계지출 감소항목

- <그림 16>에서 원리금상환을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가구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70% 이상으로 높음
- 급증한 가계부채로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총수요 감소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유발함
- <표 7>을 보면 가계지출 감소항목은 1,2분위에서 식품·외식비, 여가·문화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5분위에서는 저축·금융투자, 여가·문화비 순으로 지출이 감소함
- 엔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은 식품·외식비를 먼저 줄여 식품 소비감소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그림 16> 원리금상환 가계지출감소 여부(N: 1,798가구)



<표 7> 가계지출 감소항목(N: 1,382가구)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분위	식품·외식비(56%)	여가·문화비(18%)	저축·금융투자(14%)
2분위	식품·외식비(41%)	여가·문화비(24%)	저축·금융투자(23%)
3분위	식품·외식비(35%)	저축·금융투자(27%)	여가·문화비(25%)
4분위	저축·금융투자(31%)	여가·문화비(30%)	식품·외식비(24%)
5분위	저축·금융투자(37%)	여가·문화비(31%)	식품·외식비(25%)

17

## IV. 정책제언

### 1. 가계부채 대응방안

#### ○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3조원 지원

- 대부업·불법사금융 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1년 7월) 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은행 등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및 지원
-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2천만원, 금리 10% 초중반,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인하
- 전환 후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이자 분할상환 적용
- 총 3조원 대환대출 지원 시 특례보증 예산규모는 6천억원 추산(5배수)

#### ○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운영으로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서민들의 금융안정망 강화
- (채무상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안 안내
- (채무상담) 현재 재무상태를 전문가가 진단하고 맞춤형 재무 설계 제공
- (복지상담) 금융복지상담 외 사회복지서비스 및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 (채무자지원) 대부업체 불법추심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제도, 불법추심 신고센터 안내 서비스 제공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여 가계부채 관리 및 지원하는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18

## IV. 정책제언

#### ○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 마련

- 최근 대출이자 급등하는 시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갚거나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려는데,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해당
-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0조 4항에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허용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함(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 개정)

#### ○ 고위험 가구의 가계부채 탕감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22년 고위험 가구의 소득 1분위(573천명), 2분위(788천명)의 부채, 원리금상환액, 이자 탕감 시 소요금액 계산
- 부채 134조원, 원리금상환액 29.1조원, 이자 4조원 소요됨

구분	부채	원리금상환액	이자
1분위	41조원	7.7조원	1.1조원
2분위	93조원	21.4조원	2.9조원
계	134조원	29.1조원	4조원

#### ○ 저소득층에서 생활비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가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시스템 마련

- 보건복지부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소득 1,2분위 계층에서 생활비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사업'으로 가구별 50만원 지원한 사례(21.6)가 있음

19

## IV. 정책제언

### ○ 원금상환 유예 요구 법안 마련

-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는 시기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동시 상환은 부담이 되므로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가계부채 규모가 커서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는 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 선택권 부여
- 코로나 19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 5차례 걸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시행

### ○ 5억원 대출한도 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결합한 대환대출 상품제공

- LTV 70%, DTI 60% 조건에서 5억원 대출한도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결합상품 제공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다중채무를 가진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제공

###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동결·인하하는 규제방안 마련

- 기준금리가 빅스텝(0.5%p)으로 인상하는 시기에 시중은행이 한국은행과 같이 가산금리를 올리면 국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 22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
- 기준금리 인상 시 금융위원회가 가산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과 모니터링 강화
- 22년 7월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전년 동월 대비 가산금리를 각각 0.45%p, 0.25%p, 0.29%p, 0.55%p 인상하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더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20

## IV. 정책제언

### 2. 자영업자 부채 대응방안

#### ○ 코로나 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9조원 시행

- 코로나 이후 발생한 부채 600조원에 대한 이자에 3% 감면 프로그램 시행
- 정부 재원으로 1.5%p 이자감면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1.5%p 추가 금리인하(가산금리 인하, 우대금리 확대)로 매칭 지원
- 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는 가계대출(99.7조원), 자영업자·중소기업대출(494.2조원)으로 약 600조원 증가
- 살아있는 채권에 대한 보편적 이자감면 9조원(코로나 대출 600조\*1.5%)
- 이자감면 프로그램은 정상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금융대책으로 경영여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속한 자금상환을 통해 부채부담 완화
- 금융권의 이자수익(2021년 기준)은 40조원을 상회하여 사회적 책임 필요

#### ○ 코로나 한계차주 대환대출 40조원 시행

- 전체 코로나 대출의 5% (40조원)에 대한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
- 신보출자(4조원) → 보증배수(10배) → 대환대출 여력 확보(40조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 진행
-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 법인 소기업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뀌주는 대환대출 시행

21

## IV. 정책제언

### ○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차주 부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한국은행은 22년 3분기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을 97.4조원으로 조사하였고, 취약차주 부채에 대해 원금탕감,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자영업자 부실채무가 감소하지 않고,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 초래
-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20.4.1일 ~ 20.9.30(최초) ~ 21.3.31(1차 연장) ~ 21.9.30(2차 연장) ~ 22.3.31(3차 연장) ~ 22.9.30(4차 연장)

### ○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에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상환면제
  - 지출 증빙이 가능한 고정비 부분을 상환금에서 감면
-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납부 시행
  - 고정비에 대출금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저금리 장기 분할납부 시행
- (대상) 코로나 기간 중 성실 상환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19년 평균 매출 대비 '22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산출) 약 100만개 x 600만원(평균 임대료 50만원 x 6개월분) = 3조원



**발제 2**

#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위기 극복 방안**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위기 극복 방안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위기 극복 방안

김남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1. 부채 현황과 경제 현황
  - a. 가계부채/자영업자 부채 현황/금융기관 건전성 등
2. 자영업자 금융지원 현황
  - a. 문재인, 윤석열 정부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 윤석열 정부 실적 낙제점
3. 부채위기 극복 방안 제언
  - a. 기본 방향
  - b. 구체적 방안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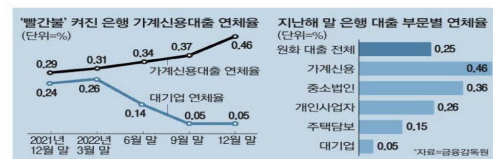
## 1. 부채 현황과 경제 현황

### a. 가계부채 현황(금융안정보고서 22. 12.)

- 가계대출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경 폭발적으로 증가. 명목 GDP 대비 105.2%(OECD 중 1위), 가처분소득 대비 206.5%(21년 기준)로 OECD 중 상위 7번째.
-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음.

### b. 자영업자 부채 현황(금융안정보고서 22. 12.)

- 자영업자의 부채는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 코로나 사태로 부채 상황 더욱 악화
- 한국은행이 추정한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은 최악 시나리오 가정 시 23년 19.1%로 22년 대비 6.2% 증가



### c. 금융기관의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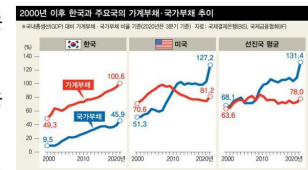
-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약 16조원으로 사상 최고, 성과급 1조 육박.

## d. 평가

<OECD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단위 : GDP 대비%)								
한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OECD 평균
14.4	25.9	29.3	34.9	22.6	18.9	24.8	24.5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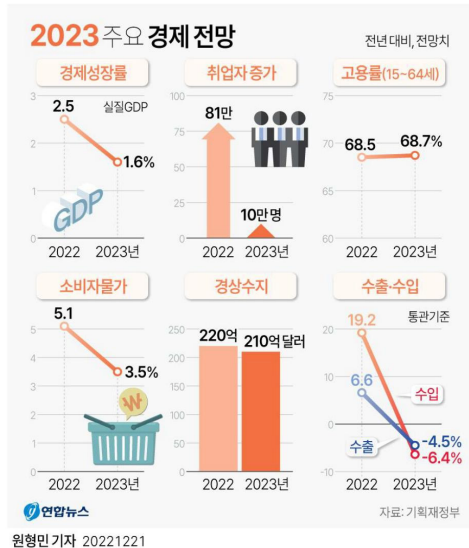
출처 : OECD.Stat(2023.1월 기준)

- 주요국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0% 넘을 때 한국은 60%정도로 양호한 반면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만 100% 넘어
- 결국 다른 국가가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올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계부채로 위기에 대처해 온 셈
- 이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최고 수익을 올리고, 가계와 자영업자는 최대 부채 위기에 놓여,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차이 없어
- 가계부채 사용 용도가 중·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 고소득층에서는 주택 구입과 부동산 투자인 점을 보면, 가계부채 대책으로 복지 강화와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DSR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 주요 선진국처럼 가계부채<국가부채로 정상화 필요, 코로나 시기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고려하여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복지를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함



## e. 금리와 경기 전망 등

- i. 금리 추이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기준금리 및 CD금리 등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 ii. 2023년도 경기 전망 : 경제성장률은 1.6%로 하락, 수출 감소, 취업자증가율 감소,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무역수지 적자 반전, 수출입 증가율 마이너스로 전환, 고용률 보합 등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 자영업자 금융지원 현황

## a. (문재인 정부)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 i. 소극적인 코로나 손실보상과 코로나로 인한 민간 경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
- ii. 금융위원회는 2020. 4.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 정책을 연장하여 왔음.
- iii. 22. 6.말 기준 141조원, 57만명 차주가 혜택을 받고 있음.

## b. (윤석열 정부) 22. 9. 27.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

- i. 금융위는 만기연장 대상자(124.7조원)에게 2025. 9.까지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 ii. 상환유예 대상자(16.7조원)에게 2023. 9.까지 최대 1년간 지원
- iii. 위 추가지원보다 채무조정 희망시, 새출발자금 등을 조성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대책 시행 중
- iv.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소진공, 기보)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시행 중

c. 새출발기금

- i. 윤석열 정부는 2022. 10. 4.부터 코로나 19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캠코 산하 특수목적기구)을 출범시키고,
1. 총 매입규모 30조원 / 캠코 법정 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하여 새출발기금에 3.6조원 출자
  2.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게는 원금 조정,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거치 12개월 내, 상환 120개월 내)
  3.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가 아닌 폐업자, 장기 휴업자, 체납자 등)에게는 (연체)이자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4. 추심, 경매 중지, 다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변제 후 2년 경과시 해제=신복위 채무조정과 동일)

d. 윤석열 정부 실적 낙제점

- i. 역점 추진했던 새출발기금이 23. 1.말 기준 2.54조원 신청, 목표 30조원 대비 8.5%로 극히 저조, 다른 금융정책 프로그램도 모두 실적 미미, 낙제점
- ii. 외면받는 이유가 다양하겠으나 과거 캠코의 배드뱅크 방식과 유사하여 감면율이 낮아 혜택이 부족한 점, 분할변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신용정보로 등재되는 불이익이 큰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
- iii.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지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자용 대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반대로 가스비와 같은 공공요금 줄임상, 다주택자 대출규제 해제 등 가계부채 위기를 키우는 정책 시행

외면받는 정책금융상품	(단위:원.%)	자료:양정숙 의원실·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프로그램명	시행시기	공급목표	공급액(공급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2022년 7월	41조2000억	11조1000억(26.9)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2년 9월	9조5000억	2672억(2.8)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	30조	2조5400억(8.5)

※공급액은 소상공인 맞춤형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나머지는 2023년 1월 말 기준

## 3. 부채위기 극복 방안 제언

## a. 기본 방향

- i. 재정을 통한 복지를 강화하여 부채 발생의 근원을 해소한다.
- ii. 추가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
- iii. GDP 대비 적절한 가계부채 비율의 수준을 법률로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 iv. 금융기관의 이익을 사회에 공헌하여 가계부채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 v.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의 고통을 경감한다.
- vi. 신용대산면을 시행하여 코로나 시기 정부의 부담을 전가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 vii. 채무조정 제도인 배드뱅크 제도 개선,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선, 법원의 도산절차 등을 개선한다.
- viii. 과중채무자에게 버티기 보다 채무조정과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 ix. 채무조정부터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채무자의 복지 전체 영역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킨다.

## b. 재정을 통한 복지를 강화하여 부채 발생의 근원 해소

- i. 우리나라는 공공복지 지출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공공 이전소득의 소득대체율 역시 낮아 중·저소득층이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ii. 생활비 용도 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복지를 강화해야 함
- iii.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그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아 가계부채를 증가시켰음.
- iv. 코로나 시기 증가한 대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적+사적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 탕감 정책을 확대 강화하여야 함

## c. 추가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실행

- i. 다주택자 대출규제 해제 등 가계부채 위기 확대 정책 중단
- ii. 금융기관이 자율 시행 중인 DSR 등 가계부채 증가 방지 장치에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정책의 안정성 확보

d. 금융기관 이익 일부 사회공헌 및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i. 금융기관이 사적 배드뱅크 설립하여 가계부채 해소

1. 사회적 정의 관념으로 금융기관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이 이익을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사회에 환원
2. 금융기관의 누적 이익잉여금 3.6조원(새출발기금 출자금과 동액)을 새출발기금과 별도로 설립하는 사적 배드뱅크에 자본금을 출자, 30조원 상당 채무 조정

ii. 가산금리 기준과 세부내역 공개하여 실질적 금리부담 완화

1.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예금자보호 보험료 등 금리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 내역을 공개(지급준비금 비용, 교육세, 수수료 등)
2.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이 사회적 논쟁과 협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서 금융기관으로 가산금리 부담 주체를 변경→ 실질적 금리 인하

iii. 강화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

1. 문재인 정부는 '22. 3.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연체이자 한도 제한, 장기 연체 개인채권 양도 제한,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공정 행위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채무조정 교섭업 신설 등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는 '22. 12. 법안 발의
2. 이에 정부 발의 법안에 더해 시효소멸 채권의 추심 금지 및 고의 추심시 제재,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범위 확대, 불법 추심 기준 및 처벌 강화, 지자체 공무원의 불법추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더 강화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강화된 개인금융채권무자보호법 제정 필요

## iv. 공정한 채권추심

1.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가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랐던데 있었음. 아마도 세 모녀는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채권추심은 여전히 채무자들에게 큰 공포를 주고 있고, 여전히 채무자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방문 추심이 행해지기도 함.
2. 채권추심이 공정하게 그리고, 사회적 편익(채무자의 경제 활동 지속, 복지부담 감소)과 사회적 비용(채권 금융사 손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함.
3.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적용 범위 확대(공정채권추심법 제8조의2) : 현행 대부업체,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불합리 개선.

4. 불공정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행위 금지 등 개선 : 현행은 폭행·협박 등의 금지(법 제9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법 제12조)을 규정 실효성 있도록 개선

## 5. 대부업 감독 행정 강화

- a.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체를 감독하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으므로(대부업법 제13조), 불공정한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함.

- b. 검·경·지자체 특사경·금감원의 합동 단속 추진

## e. 적정 가계부채 유도를 위한 준칙 제정

- i.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정시에 가계부채 적정 수준을 국회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여 총량을 규제

- ii. 위 법에 금융위원장에 적정 개인금융채무유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함. 금융위원장은 위 계획을 수립 전에 국회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iii. 이를 통해 현재 세계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하게 감축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f. 신용대사면

- i. (기존 신용불량자) 필요불가결한 신용정보 수집과 보유,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신용정보의 수집 및 보유,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 향후 기준을 법률로 명확화
  - 1.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량 신용정보를 전부 일괄 삭제하는 등 신용대사면이 필요함

- 2. 연체정보, 채무조정절차 이용 정보 등 신용정보는 신용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인데, 수집 정보와 보유 기간 장기화로 그 목적을 벗어나 징벌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 신용정보 등록 기준은 신용정보법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 사규로 결정⇒모든 신용정보의 수집 대상과 보유 기간, 제공 대상을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
- 3. 신용정보는 이제 전과 기록과 같이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함, 하지만 ⇒ 국회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
- ii. (코로나 신용불량자) 코로나 시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량 신용정보 발생한 경우⇒코로나로 유발된 신용불량정보 대사면
- iii. (채무조정 졸업 신용불량자) 졸업 또는 절차 개시 즉시 신용정보 전면 삭제
  - 1. 신용회복절차, 새출발기금, 법원회생, 법원파산 절차 개시부터 절차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 신용정보(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신용전과자 낙인 지속



2. 하지만, 신용회복절차 등을 거친 경우 채무가 "0원"으로 되어 순자산이 "+" 상태로 전환되며, 신용회복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순자산이 "-"인 사람보다 신용도가 높거나 같아야 함.
3. 채무조정 절차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전과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므로 파산절차를 졸업(면책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이 인가, 신용회복 채무조정 승인 시 신용불량기록 삭제하여 조기 새출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파산면책 확정시 후 5년간, 개인회생신청 후 통상 3년간(면책시), 개인워크아웃 개시 후 2년간 신용정보기록 보존(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2조 제3항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 정보, 4) 금융질서문란정보).

#### g. 배드뱅크 개선

- i. 감면을 상향, 변제기간 축소, 신용불량정보 등재 중단 등 개선 조치 필요

#### h.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선

- i. 장기 미변제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소송 금지(예외적으로 사해행위 확인 된 경우는 제외)
  1. '21년 기준 캠프 시효연장 소송을 한 채권액(1.64조원)이 탕감채권액(1.28조원) 보다 더 많고, 시효연장 소송 비용을 포함한 채권추심비용(185억원)이 추심액(1264억원)의 21.3%
- ii. 채무감면을 50~70%로(현행 통상 30~50%) 대폭 상향, 변제기간 5년(현행 통상 8년)으로 감축
  1.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 기간이 대부분 96개월(8년)으로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장기간.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8년→5년→3년으로 단축되었으나 개인워크아웃의 변제 기간은 최초 개인회생의 8년을 고려하여 장기로 설정되었으나 그 후 단축되지 않았음. 이에 실효율을 낮추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워크아웃의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대폭 감축시키고, 감면율을 상향하여야 함
  2. 이를 통해 현재 약 30% 수준의 실효율(중도 변제 실패)을 낮춰야 함.

iii. 신용회복위원회-회생법원 상호 절차운용 교류 확대

1. 신복위-법원 협약을 통해 Fast-Track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대비 1.8%만 법원에 개인도산절차를 신청했을 정도로 제도 활용이 미진함. 이에 신복위가 과감하게 Fast-Track 제도를 운용하도록 신복위-법원 협약 개선 필요
  - a.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실효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을 보면, 그런 채무자는 분할 변제형인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법원의 개인파산절차가 더 적합한 것으로 추정됨.
2. 신복위 심사 단계에서 실패가능성 높은 채무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적용
3. 신복위가 실효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에게 법원 도산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토록 내부 매뉴얼 수립

i.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도산사)건 개선 방안

- i. 파산절차 용어 개선(채무자회생법 개정) : “파산”, “선고”라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인해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있고, 이 절차의 이용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 있음
- ii.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 폐지(해당 법률 개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으로 일괄 폐지)
  1. 파산선고 또는 면책불허가 확정시 전문자격 또는 군인 등 일정 공무원의 신분 등 271개 취업/자격을 제한하는 군인사법 등 234개 법률 존재. 파산은 형벌이나 제재가 아니 채무정리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취지와 모순적.
- iii. 개인파산절차 종결(면책) 후 금융 지원(금융위 업무)
  1. 현행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소액금융지원 불가. 같은 채무조정 절차임에도 불합리한 차별.

## iv. 개인파산절차 우선 운용

1. 장래에 생계비 이상의 고정적 수입이 불확실한 경우 개인파산절차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파산선고”라는 용어의 부정적 성격, 법원이 불확실하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또는 소득은 없지만 비교적 젊은 채무자에게 개인파산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점, 공공정보 기간도 면책 후 5년으로 장기간인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됨
2. 이에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적극 운용하여, 신속히 채무로부터 면책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제도 운용을 변경하여야 함.

## v. 개인워크아웃 절차와 같이 최저생계비 인정 폭 확대(법원 실무준칙 개정)

1.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상향(법원 실무준칙 개정) :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현실성이 없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향 필요(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의견).
2. 개인워크아웃은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생계비에 포함되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나 전업주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차별 폐지.

## vi. 전국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의 격차 완화

1. 법원 별로 절차 소요 기간과 인가율 등에서 편차가 있고,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신규로 설치토록 법원설치법이 개정되었음.
2. 서울회생법원과 교류를 확대하여 선진 재판 행정을 참고 하여야 함.

## vii. 개인파산의 재단재산에 제외되는 소액보증금 범위 확대(채무자회생법 개정) : 현행 서울 5,000만원→\*1억원) 상향

- a. 현행 소액 보증금으로 제대로 된 주거 얻기 어려워.

## viii. 파산관재인/회생관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평가제도 도입(법원 행정 개선 등)

1. 파산관재인(보조인 포함)/회생관리위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고압적 태도와 심문, 법적 근거 없는 환가 요구나 면책불허가 위협 등 부당한 업무 수행 사례 빈발, 그 원인은 인센티브 방식의 보수체계가 원인으로 추정

- ix. 파산관재인 등 인센티브 방식 보수 규정 개선(법원 행정 개선)
- x. 무리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또는 환가 지양
- xi. 주식-가상자산 투자 청산가치 산입에 관한 기준 전국 통일
- xii.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 TF 설치
  - 1. 자영업자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인도산절차와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으나 개인도산절차에서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애로.
  - 2. 이에 법원과 유관기관이 자영업자 개인도산절차 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j. 채무조정 상담+지원 강화(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회 산자위,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 i. 공공영역에서 과중채무자에 대해 “버티기”보다 “채무조정+재기”에 나서도록 상담 등 지원 필요
  - ii. 채무자 조정 활성화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채무초과 채무자들이 자포자기로 포기하지 않고 파산·회생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임
  - iii. (금융위, 중기부)파산하는 채무자를 접할 수 있는 은행, 제2금융권,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에 채무자들이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또는 이들에 신청을 지원하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중요
  - iv. (금융위)금융기관 직원들의 구두 안내, 문자 안내, 안내 리플렛 등의 비치, 금융기관 자체내 상담시스템과 그 상담실적의 점검(금감원) 실시
  - v. (국민행복기금-회생법원)이 협약을 맺고, 시효연장 소송 대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면 접촉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인파산 제도 교육 및 안내하고, 시효연장 소장에 파산절차 소개 및 파산절차

지원 내용을 첨부토록하여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한국회생파산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파산 신청 지원

- vi. (지자체)자영업자 중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채무자를 접할 수 있는 각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각 지자체 창업지원 창구 등에 파산·회생과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 필요

k. 지자체의 금융복지사업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지자체)

- i. 면책 이후의 새출발을 위하여 금융복지사업(주거/금융/교육/취업)과 연계 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와 같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i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은 연계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3개소)는 9,500명의 2.4조원 상당 채무를 면책 성공.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사건 중 11.8%가 위 센터가 조력한 사건(2021년 기준).

- ii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천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 유사한 채무자 지원기관 있으나 아직 그 역량이 충분하지 않음.
- iv. 지자체의 금융복지사업과 연계 강화 사업을 시도지사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제안⇒전국 확산

## &lt;부채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개선과제&gt;

담당기관	개선과제
국회 법사위, 법무부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금리 현행 유지
	공정한 채권추심법 개정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회 산자위, 중기부, 지자체	채무조정 상담+지원 강화
검찰, 경찰, 지자체 특사경, 금감원	불공정 채권 추심 합동 단속
국회 법사위,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개정(파산 용어 개선, 파산자 자격 제한 폐지)
	개인파산절차 우선 운용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 개선
	개인파산의 소액보증금 범위 확대
	전국 법원 도산제도 운영 격차 완화

	파산관재인/회생관리위원 감독 강화 및 평가제도 도입
	파산관재인/회생관리위원의 인센티브 방식 보수규정 개선
	무리한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 금지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 TF 설치
국회 정무위, 금융위	새출발기금 개선
	캠코 채무조정 제도 개선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
	파산자 등 공공정보 등재 기간 단축
	전국민 압류방지 안심통장 신설
	파산면책 후 햇살론 등 금융 지원
지자체	불공정 채권 추심 단속 강화
	지자체 금융복지사업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강화

토론 1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

### □ 서론

### □ 본론

#### I. 현황

가. 비상(非常)한 시기에는 ‘비상(非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 두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나. 악성채무 해결방법과 채무조정 진단기관의 부재

- 악성채무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처방
- 골절된 환자에게 파스를 발라주는 처방사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 도덕적 해이 도그마에 갇힌 대한민국과 법원

- 채무자를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도덕적 해이 프레임의 본질
- 제도 이용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도덕적 해이 프레임
-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개인회생도 더디고 어렵습니다.

라. 빚 문제를 해결하고도 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 새로운 시작의 발목을 부여잡는 ‘신용전과’
- 개인파산, 회생 등으로도 감면, 면책받기 어려운 조세채권

마. 소결

#### II. 해결방안

가. 채무조정 이용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살 길을 터줘야 합니다.

-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파산선고 자격제한 규정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신용거래 제한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 법원 결정을 받은 채납자의 결손처리를 통한 구제

나. 법원의 전문성 강화,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생절차 모색

- 채무자회생법 취지에 맞도록 법원의 전문성 강화
- 자영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절차개선 연구 필요성
- 공공기관의 상담을 통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특별 절차의 고안

다. 중립적, 객관적인 채무조정 진단기구 - 금융복지사업의 활성화

- 금융복지사업의 개요
-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시 시작’ 협력사업
- 금융복지사업의 성장 이유와 확대 필요성

라. 소결 그리고 ‘다시시작’을 위한 캠페인

### □ 결론

## □ 서론

코로나19 끝에서 다들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도 잠시뿐, 국제경기 악화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중고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하에서는 두 분 발제 내용에 관해 일상적인 시기가 아닌 비상시기인만큼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후, 서울과 경기도에서 수행중인 금융복지 사업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계채무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 □ 본론

### I. 현황

#### 가. 비상(非常)한 시기에는 ‘비상(非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 두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물론 악성화로 인한 피해가 예측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전후로 45%가 증가했고, 그 중 비은행대출 잔액이 76.3%나 증가<sup>1)</sup>하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약 16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sup>2)</sup>하고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해 제시한 개선안, 즉 다방면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개선되거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악성부채로 힘들어 하는 시민을 직접 대하는 금융복지사업 현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선책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솔직히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계부채 규모가 국민총생산을 초과했고,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대량으로 속출하는 이 시기를 일상(日常)적인 시기가 아닌 비상(非常)상황이라 규정한다면, 또 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린 이유도 이들이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였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더해 기록적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꿀맛 같은 성과를 소수만 누리고 있다면, 이제 대응방안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자감면이나 대환대출 등 이전 정부

1) 민주연구원 남국현 연구위원 발제문 5쪽, 6쪽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 발제문 3쪽

들도 추진했던 일상적인 연착륙의 방법이 아니라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이 대규모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복지연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파산과 회생 및 복지연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킨다거나 성실채무자의 허탈감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말씀드릴 금융복지사업에 관해 고위정책결정자분들도 다소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 귀 기울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계부채가 줄었습니까? 부채보다 가계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까? 더 이상 잘못된 지적에 움츠릴 수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이후 2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한계채무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대응이 아닌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나. 악성채무 해결방법과 채무조정 진단기관의 부재

### ○ 악성채무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처방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단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처방이 뒤따릅니다. 빚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채무성격과 채무자 연령, 부양이 필요한 가족관계 및 영업·근로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 가능한지 등 채무자가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악성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주관하는 워크아웃, ② 법원을 통해 일부 변제 후 3년경과 시 잔존채무를 면책 받는 개인회생, ③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잔여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시키는 개인파산·면책, 이 세 가지<sup>3)</sup>가 있습니다.

### ○ 골절된 환자에게 파스를 발라주는 처방사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처방, 신복위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3) 이 외에도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이나, 시효도과를 앞둔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시키는 채권소각 정책을 해결방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경험에 비추어, 대환대출은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만 유효할 뿐 그 외 다른 채무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채권소각은 한 두 개 채권소각으로 채무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정책수혜자인 채무자들 대부분 채권이 실효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에서, 두 정책 모두 주효한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 별문제 없지 않은가 하는 시각이 있겠으나,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작금의 상황은 진단 없이 곧바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을 수 있는 의약분업 이전 상태와도 같습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 의사가 진료해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진단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생깁니다. 실례로, 개인회생이 적절한 채무자가 신복위 상담을 받으면 워크아웃을 합니다. 지급불능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해야 할 채무자도 법원 근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개인회생을 하거나, 신복위에 가면 워크아웃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에게 파스를 발라주는 처방과 같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입니다.

20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40대 관장님이 코로나19로 관원들이 70%나 빠져나가자 자기 밑에 있던 사범을 내보내고, 결국 관장 본인이 야간 배달일까지 하며 어렵사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태권도장을 리모델링하며 얻은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자 제2금융권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어렵사리 돈을 융통했습니다. 가갓세, 도장운영비, 공과금, 가족 생활비도 돈이지만, 언제 갚힐지 모르는 암흑과 달마다 불어오는 원리금에 절망의 나날을 보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대출이 고맙기는 하지만 연체를 막고자 급한 빚을 돌려막는데 사용하고 보니 수중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로 연명하다 버티기가 힘들어 신복위 상담을 받았습니다. 8년 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연체된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연체를 막고자 투잡을 뛰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연체 즉시 압류가 시작되는데 답답합니다. 인터넷 홍보를 보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사무장이 3년간 갚는 개인회생을 하자며 수임료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분납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송달료나 인지대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덜컥 겁도 납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어디 하나 마땅한 데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봐도 비슷한 정보가 넘쳐 혼란스럽습니다. 폐업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나, 무도인(武道人)으로만 살아온 인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인수하라는 하지만 카드 돌려막기와 생활비, 양육비로 쓴 본인의 빚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전 병원이나 약사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신복위나 법률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함께 하도록 한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관계<sup>4)</sup>나 수익구조<sup>5)</sup> 등 그럴 수밖에 없는 각자

나름의 사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를 중립적이고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전문기관의 부재는 위 사례처럼 한계채무자 상황을 악화일로에 치닫게 합니다. 비단 태권도 관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당, 노래방, PC방, 헬스클럽 등 6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이 한계채무 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절망 속에 있습니다.

## 다. 도덕적 해이 도그마에 갇힌 대한민국과 법원

### ○ 채무자를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도덕적 해이 프레임의 본질

정권초기 배드뱅크(Bad Bank)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관련한 주요 언론기사에는 빠지지 않고 한 꼭지가 등장합니다. “도덕적 해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sup>6)</sup>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태권도 관장님이 불성실해서 빚을 못 갚은 것일까요? 급여소득자의 빚 문제를, 영업 제한, 집합금지 여파로 폐업 일보 직전까지 간 자영업자와 같은 평면으로 보아 ‘역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카드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사채는 물론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빚을 막아낸 사람을 ‘성실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덕적 해이’가 허구주장임을 알 수 있음에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현장 경험으로 보건대, 도덕적 해이는 금융권이 자신의 수익 보전을 위해 윤리적으로 각색한 프레임입니다. 채무조정이 많아질수록 자신들 영업이익에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해 이를 방어하고자 도덕적으로 덧씌운 형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원주택을 짓도록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산불이 나 기성 공사부분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가정하면, B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약이라도 돈을 빌려줬을 때는 다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불가피한 사정의 존부를 불문하고 도덕적 형틀을 먼저 씌웁니다. 마치 코로나19로 늘어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불성실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인지 또는 기존에 채권자가 누렸던 이자수익의 크기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갚지 못한 순간 곧바로 낙인의 문신이 찍힙니다. 유죄추정 원칙입니다. 불법사채 등 악탈적 대출의 피해자라도 가해자

4)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신복위와 협약된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변제기 유예,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이 가능한 탓에 채권자의 이해를 넘어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 과거 개인도산 법률시장은 압류·추심 등 궁박한 상태의 채무자로부터 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등)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 변호사의 무관심 속에 속칭 브로커 중심의 시장이 일반화되었고,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채무자(수임료 확보가 용이)를 위한 개인회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6) 경향신문 2022. 04. 14.자 「‘배드뱅크’ 소상공인 빚 탕감 해법 뭘까..역차별 재정마련 우려도」 기사 중

인 사채업자에게 원금은 물론 법률이 정한 이자까지는 다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 ○ 제도 이용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도덕적 해이 프레임

이 형틀은 강력하고도 견고해 채무자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엄연히 국가제도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인생막장’이라는 비난과 낙인을 각오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혐오적인 시선은 적시에 제도를 이용해야 할 채무자들조차 제도를 회피하는 역설을 낳습니다. 서울센터에서 근무할 때 현장파악 위해 혼자 황학동 소재 가게에 들러 여러 얘기 끝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아침부터 재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침에 찾아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윤리적 형틀이 스스로를 얹매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주소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어떤 해결방안이 적절한지 알 수도 없는데, 설령 운이 좋아 맞는 처방을 선택하더라도 죄인의식에서 발현되는 **무력감**을 안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채무자나 회생채무자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표 1] 경기권 법원의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과 인가율

(단위: 개월, 인가율)

법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간 인가율
서울회생	8.2	8.3	7.3	6.1	73.7%
의정부	10.1	8.9	8.8	8.2	62.6%
인천	13.0	14.1	10.2	8.0	<b>51.4%</b>
수원	10.2	11.4	9.7	<b>8.4</b>	56.7%

위 표는 박주민 의원실이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20. 10.경 발표한 자료에서 경기권역만 편집하여 가공한 내용<sup>7)</sup>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사는 채무자와 수원에 사는 채무자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2개월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위 표에는 없지만 울산과 부산은 서울보다 무려 5~6개월 더 늦습니다.<sup>8)</sup> 백보 양보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가가 나오면 좋을 텐

7) 박주민 의원실 2020. 10. 07.자 보도자료

8) 개인회생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부산지방법원은 평균 10.7개월이, 울산지방법원은 11.9개월이 걸립니다.

데, 인천지방법원은 51.4%에 그칩니다. 개인회생신청자 2명 중 1명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해 부산, 울산, 청주지방법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sup>9)</sup> 서울에 비해 지방 소재 채무자가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전혀 그럴 리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이 사회가 덧씌운 도덕적 형틀을 깨고 법의 취지에 알맞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방에 소재한 법원들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유죄추정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 봅니다.

회생(回生), 즉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려 신청을 했는데,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여하고도 절반만 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희망을 품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는 회생이 아닙니다. 다시 죽이고, 두 번 죽이는 회사(回死)입니다.

#### ○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개인회생도 더디고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채무자 소득은 월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sup>10)</sup>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이 됩니다. 반면 영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소득 파악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장사하는 가게가 많다 보니 장부를 쓰지 않는 사장님도 있고, 자기 집안 살림과 돈을 버는 영업점(가게)회계의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품 등 자신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나 재산파악이 어렵다보니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보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기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사무관과 같은 내부 회생위원이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은행근무경력 등의 자격을 구비한 외부 회생위원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러한 외부 회생위원을 감독하는 전담재판부를 통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sup>11)</sup>. 개인회생 신청서류도 영업소득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sup>12)</sup>. 뿐만 아니라 외부회생위원은 인가결정 이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변제한 금액의 5% 범위 내에

9) 부산지방법원은 43.4%, 울산지방법원은 48.2%, 청주지방법원은 49.7%로 나타났습니다.

10) 예를 들어,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A가 채무 1억 원을 보유하고, 월 평균 22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A는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2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104만 원(220만 원-116만 원)을 매월 3년간 변제하는데 성공하면(총 3,744만 원), 나머지 6,256만 원을 면책 받게 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11)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602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12)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지만, 자영업자인 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준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를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3호

서 보수를 받습니다<sup>13)</sup>. 채무자가 회생기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변제금이 많아질수록 회생위원 보수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은 구조 자체만 놓고 살펴본다면 법원 감독이 느슨해질 경우 고압적인 태도로 채무자인 자영업자를 쥐어짤수록 외부회생위원이 이익을 누리게 되고,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 회생이 급여소득자에 비해 어려운 이유입니다.

## 라. 빚 문제를 해결하고도 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 ○ 새로운 시작의 발목을 부여잡는 ‘신용전과’

현대 자본주의는 실패를 양분으로 성장의 꽃을 피웁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드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 만화왕 월트 디즈니, 허쉬초콜릿을 세운 밀튼 허쉬,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 파산을 겪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재기의 성공사례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른바, ‘신용전과’<sup>14)</sup>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32조의2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개별 법령에서 이와 모순된 규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바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실패자를 윤리적 형틀로 가두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의 활용기간과 보존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sup>15)</sup>, 금융위원회 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5년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파산선고·면책, 개인회생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기록은 5년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통상 3년), 워크아웃 채무자는 2년 이상 성실 변제할 때까지 공공기록으로 보관됩니다. 다시 말해 신용점수를 급격히 상승시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위 기간 동안 금융권 대

1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제1항, 제3항

14) ‘신용전과’, ‘신용사면’은 모두 **경제적 실패자를 형사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사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15) 신용정보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출과 신용거래가 절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실패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관여 아래 임차보증금 등 최저생계수단을 제외한 재산 전부를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그야말로 아무런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 한들 씨앗자금 없이 재기할 수 있을까요? 또, 개인회생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한다면 이 또한 ‘돌려막기’에 다름 아니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신용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수긍이 갑니다만 묻고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3년 제한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 ○ 개인파산, 회생 등으로도 감면, 면책받기 어려운 조세채권

장사가 안 되니 세금과 공과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해야 하니 빌려서 메꾸기도 하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지옥에 빠지면 체납도 한순간입니다. 어렵사리 채무조정제도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도하지만 조세만큼은 예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와 제625는 조세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도 면책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악성채무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들이 다시 영업을 개시하려 해도 이러한 체납처분에 묶여, 급기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장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악성채무를 조정하는 처방은 신복위의 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 해결에 관해 중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는 기관이 없어 채무자에게 적절한 처방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이익 보전을 위해 윤리적으로 각색된 도덕적 해이가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진입장벽이 되어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가로막고, 전문법원이 있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조차도 윤리적 형틀에 갇혀 있습니다. 어렵사리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소득산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그 절차진행이 더디고, 행여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신용전과’와 조세채권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미국과 같이 신선한 새출발(fresh start)<sup>16)</sup>을 기대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16) 미 연방 파산법 상의 법률표현입니다.

## II. 해결방안

### 가. 채무조정 이용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살 길을 터줘야 합니다.

○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파산선고 자격제한 규정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금융복지 현장경험에 비추어, 한계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애초부터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격제한 규정, 즉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경제적 실패자를 처벌하는 구시대적 산물로서 낙인의 두려움으로 적시에 파산을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파산기피 및 개인도산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개정이 필요한데, 수십여 개 단행 법률에 산재해있어 이를 일괄하여 개정하기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① 현행과 동일

② 이 법 외에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신분이나 자격의 결격, 당연 퇴직, 자격취소사유 또는 허가·등록이나 영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 경우, 이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자”로 변경한다.

○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신용거래 제한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도산절차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채무자들이 재기 의지가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꺾이는 지점이 바로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1. ~1의2. (생략)

2. **신용질서 문란행위**<sup>17)</sup>와 관련된 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3. 법원의 **파산선고·면책, 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 부터 **5년** 이내

17) 신용정보법 제2조 1호의4. 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정의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통해 파산선고, 면책, 회생, 워크아웃 등의 관련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sup>18)</sup>,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역시도 5년 내에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채무조정제도 이용행위’를 같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질서 문란행위”란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험사기, 위조·변조를 통해 허위대출 등을 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개인파산을 경제범죄행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위 신용질서 문란행위 개념 안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즉,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도 5년, 재산은닉 등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써서 허위파산 등의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이 5년간 공공기록에 등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기관조차 개인파산자를 파렴치한의 범죄행위로 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는 한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를 통해 자본주의 성장을 도모하는 채무조정제도는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낙인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자 신용거래제한은 발제자 의견과 같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정한 파산절차 안에서 변hos자자격을 구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은닉과 편파변제, 사해행위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후 다시 법원 재판부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다고 내린 최종 판단이 바로 면책결정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선한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신용제한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재파산은 3년, 재재파산은 6년과 같이 파산횟수에 비례하여 규율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파산제도의 남용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회생기록은 변제계획에 따라 월변제금을 납입하는 3년의 회생기간 동안 공공기록으로 등재되고, 완납하여 면책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복위가 주관하는 워크아웃 기록 보관기관은 2년입니다. 발제자 의견을 절충<sup>19)</sup>하여 두 제도 모두 각 1년으로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을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18)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19) 이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 발제문 21쪽

### ○ 법원 결정을 받은 채납자의 결손처리를 통한 구제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영세 자영업자의 채납세금을 모두 결손처리하면 좋겠지만, 코로나 위기와 채납 간 인과관계 설정범위, 소액채납의 기준금액<sup>20)</sup>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과 자칫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져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합금지조치, 영업제한 등 코로나 위기 기간 내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발생한 채납된 조세채권을 면책시키는 방안 역시도 위와 동일한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건대, 우선 개인회생채무자는 변제계획 안에 채납조세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개인파산채무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도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변제능력도 없음’을 사법부를 통해 공적으로 판단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사법부 판단과 법적 안정성을 존중한다면, 조세징수 권한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위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과 동시에 국세, 지방세 등 해당 채무자의 채납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를 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세금 납부 능력도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나. 법원의 전문성 강화,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생절차 모색

### ○ 채무자회생법 취지에 맞도록 법원의 전문성 강화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법률의 목적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回生), 글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법이고, 채권자와의 법률관계 조정은 그 수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은 그 목적보다 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나 회생위원 등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전통법 체계 아래 일반 재판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발령받아 개인도산법리를 처음 접하면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수정자본주의의 법리를 곧바로 체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채무자가 처한 삶과 채무발생원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20) 1,000만 원 이하로 할지, 2,000만 원 이하로 할지

등 사건기록을 반복하여 읽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균형 감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판단에 관한 제대로 된 안목이 생길 시기가 되면 기업파산, 회생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발령이 나거나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서울회생법원도 이렇진대 지방법원의 상황은 볼 보듯 뻔합니다.

최근 수원과 부산에 전문도산법원인 회생법원이 들어섰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가 큼니다. 다만, 그 외 지방법원은 지금처럼 순환보직을 취하더라도 파산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은 전문성 함양을 위해 최소 5년간 자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방안이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각급 법원 파산재판부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그 감독 아래에 있는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의 태도 역시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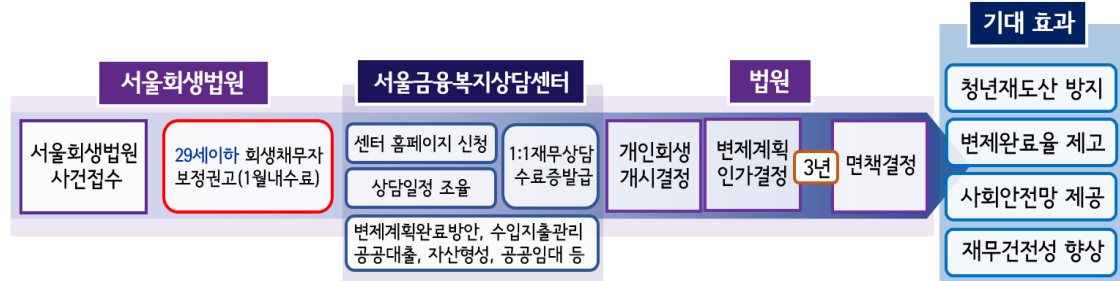
### ○ 자영업의 특성을 반영한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절차개선 연구 필요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입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는 소득파악이 비교적 쉬운 급여소득자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는 ‘채무자’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실질이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외부 회생위원과 전담재판부를 둔 이유도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설계된 개인회생절차에 자영업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영업자인 영업소득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이에 기반한 입법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단기적으로는 현행 진행 중인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의 협력프로그램인 청년채무길잡이와 같은 절차를 향후 자영업자 영역에도 응용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 공공기관의 상담을 통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특별절차의 고안

## ▶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서울회생법원 간 ‘청년재무길잡이’ 협력사업 절차개요



서울금융복지센터 근무시절, 약 2년간 준비 끝에 2021년 10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라는 협력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사업골자는 이렇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금융복지센터 지역 센터에서 상담을 수료한 후 그 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법원은 도박, 주식투자 등 5가지 결격사유<sup>21)</sup>가 없는 한 변제금 상향 없이 **통상 3년인 개인회생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기 청년의 재도산을 막고, 보다 빠른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개시된 이 사업모델은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파탄에 빠진 청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에 착안한다면,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서울금융복지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담을 수료받거나 채무발생원인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받을 경우, 보다 빠른 재도약을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① 위 청년재무길잡이 시행에 2년이 걸렸던 것처럼 법원을 설득하는 문제와, ② 상담을 수행할 공공기관<sup>22)</sup>의 정비, ③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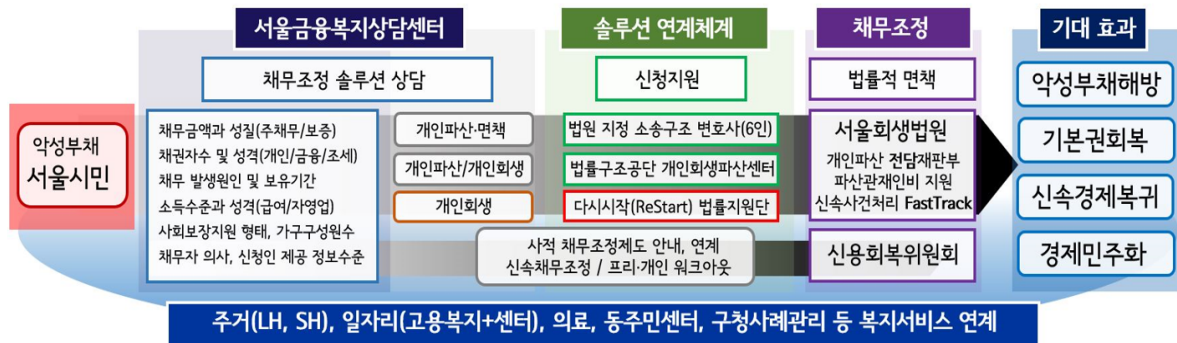
21) 5가지 결격사유로는, ①채무발생원인이 도박이나 주식·비트코인 등의 투자에 기한 경우, ②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③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④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미만인 경우, ⑤조세채권 등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센터가 수행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 특성 상 인력확충이 매우 어려워 업무량 과부하상태인 현재까지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다. 독립적, 객관적인 채무조정 진단기구 - 금융복지사업의 활성화

### ○ 금융복지사업 개요

#### ▶ 서울금융복지센터의 채무조정진단 및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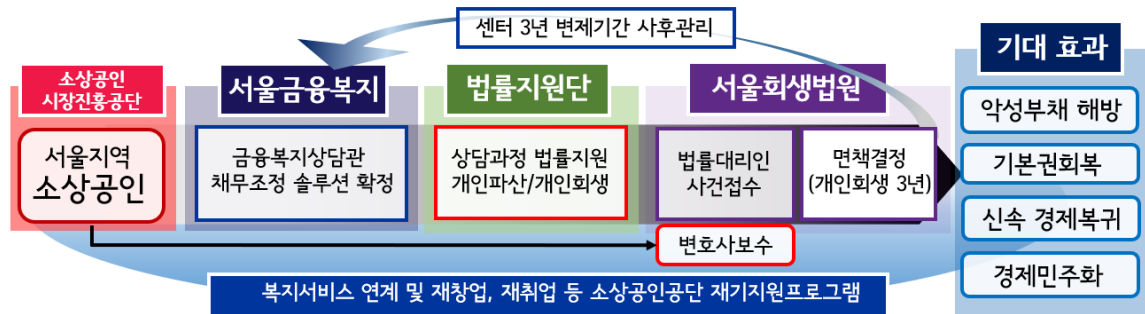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경기금융복지센터』와 같은 금융복지사업을 알고 계신지요. 서울센터는 개소 후 10년 동안 1만 여명 서울시민의 악성부채 3조 원 이상을, 경기센터는 개소 후 7년 동안 3,550명 경기도민의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말끔하게 면책시켰습니다. 또 채무조정과 함께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왔습니다. 서울센터 상담인력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하는 7명 중 1명은 서울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상담후기 등 센터 이용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받아 질적인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는 기관입니다.

### ○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시시작’ 협력사업

앞서 서두에 살펴본 40대 태권도 관장님 예시는 서울금융복지센터가 진단을 내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공단’)의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뛰던 무도인은 신복위와 서초동 법률사무소가 내리는 각기 다른 처방에 갈팡질팡하다 우연히 알게 된 서울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진단을 받고, 믿을 만한 도산전문 변호사 협력까지 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았습니다.

## ▶ ‘다시시작(ReStart)’ 협력사업 체계도



서울금융복지센터가 소상공인공단과 2021년 4월 개시한 ‘다시시작(ReStart)’ 협력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 신복위 워크아웃이 필요하면 해당 지부로 연계하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산전문 변호사가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되, 그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멀지 않아 경기금융복지센터 역시도 유사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 금융복지사업의 성장 이유와 확대 필요성

금융복지센터는 서울과 경기 외에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sup>23)</sup> 하지만 서울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계약에 의한 운영방식을 취하고<sup>24)</sup>,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조정에 인식한 지방법원의 태도로 말미암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복지사업이 공공영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조정에 관해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는 기능 때문입니다. 수돗물처럼 겨울에 차고, 여름에 더운 물이 아니라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여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지하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채무자가 요구하는 대로<sup>25)</sup>가 아니라 객관적인 채무자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진단입니다. 진단에 이어 제대로 된 처방이 이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시민의 신뢰를 받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처방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및 서울회생법원은 진단기관인 금융복지센터와 그 역

23) 2013년 7월 서울에서 최초 개소한 이래, 2015년 경기도와 전남을 필두로, 경남, 전북, 부산, 전주,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하였고, 성남과 원주와 같은 소도시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24) 위탁운영 방식은 금융복지사업 및 소속직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5) 종종 시민분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개인파산을 해달라거나 개인회생을 해 달라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이 다르니 애초부터 경쟁상대가 아니고, 상생의 협력관계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도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반대편에 위치한 채권회사들도 금융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컨대, 시민의 재기를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력할 날도 곧 오리라 기대합니다.

지금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채무자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형틀에 미리 겁먹은 채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결정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금융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서울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계채무자들의 빚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라. 소결 그리고 ‘다시시작’을 위한 캠페인

경제적으로 실패한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의 역할이 되는 채무조정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격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신용전과’를 신속히 삭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기록과 워크아웃기록 모두 1년으로 줄이고, 개인파산·면책결정은 지급불능상황임을 선언한 사법부의 공적판단임을 고려하여 면책결정 확정 시 바로 삭제하되, 파산횟수 누적 시마다 그 기간을 늘려 제도 남용을 방지하며, 체납된 조세 역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상 채무자의 재기가 가능하도록 결손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도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법관인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급여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에게 맞는 개인회생방안은 없는지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간 협력사업인 ‘청년채무길잡이’에 착안하여 자영업자의 개인회생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빚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기관만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는 금융복지사업을 서울형 모델을 중심으로 보다 활성화한다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한계채무자를 위한 빚 문제 해결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굳고 단단한 윤리적 형틀을 깨는 작업입니다.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명제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실패극복 과정에 동반되는 개인파산과 회생 등을 거론하면 고개를 젓는 역설에서 이젠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상한 결단으로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채무조정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지극히 당연한 제도이고<sup>26)</sup>, 이것이 뒷

26) 사유재산 개념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중국)는 개인파산제도가 없습니다.

받침되어야 성장도 가능하다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운동이 절실합니다. 비상시기이니만큼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결론

법률로 보장된 채무조정제도를 덮고 있는 윤리적 형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격제한·신용전과·채납처분 등 제도 이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제한과 족쇄를 풀며, 공공의 영역에서 중립적·객관적인 진단으로 정확한 채무조정방안 제시와 함께 ‘다시시작’에 필요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금융복지사업이 활성화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경제적 실패를 포용하는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빛을 목숨으로 갚는 구시대의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2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 위기와 극복 방안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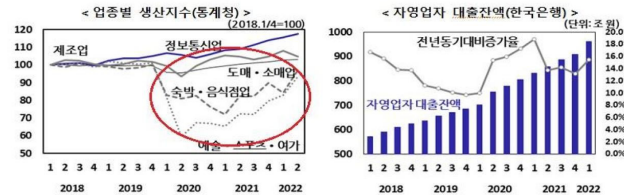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 위기와 극복 방안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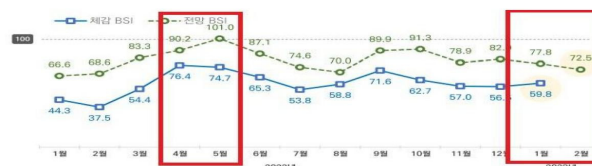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금융 위기와 극복 방안

#### I 소상공인 경영환경 현황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스포츠·여가, 숙박, 음식·서비스 등 대면 업종의 생산지수가 감소, 자영업자 부채 급증



■ 소비자 소비심리 및 소상공인 경기 동향에서도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하락세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소진공, 23.2)

- 소상공인 경기지수 :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일시 반등했으나, 3고위기 및 난방비 급등으로 하락 전환
- 소비자 심리지수 : 거리두기 전면해제('22.4.18)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시 반등했으나, 다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하락 전환
  - 소비자 심리지수(한은) : ('22.2) 103.1 → ('22.4) 103.8 → ('22.6) 96.4 → ('22.7) 86.0
  - 소상공인 체감 BSI(소진공) : ('22.2) 37.5 → ('22.4) 76.4 → ('22.6) 65.3 → ('22.7) 53.8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22.12)에 따르면,

- '22년 대비 '23년 자금사정에 대해 소상공인 52.4%가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경영회복 예상시점은 '1년이상~2년 미만'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이상이 24.3%로 뒤를 이음
- 최근 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2023.1)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19, 3고 위기, 난방비 급등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난에서 소상공인 영세성이 심화 되는 것이 원인

<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규모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영업자 수(전체)	5,638	5,606	5,531	5,513	5,632
1인 자영업자	3,987	4,068	4,159	4,206	4,26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1	1,538	1,372	1,307	1,365

(단위 : 천명)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II 소상공인 부채 현황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2.3분기 기준 1014.2조원으로 급진적으로 증가  
<자영업자 대출 잔액>

기준시점	18.Q4	19.Q4	20.Q4	21.Q4	22.Q3
대출잔액	624.3	684.9	803.5	909.2	1014.2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 (단위 : 조원)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2022.12)'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대출 금액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
- 금융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매출부진이라 답한 응답자가 59.7%, 각종 비용상승 36.7% 순 (자료출처: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22.12)
- 대출 잔액 증가율을 보면 중·저소득층,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국은행, 21.3분기)

① 소상공인 소득분위별 대출 증가율

소득분위	1분위(저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고소득)
대출증가율	17.3%	17.4%	20.4%	16.1%	10.1%

②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19.8%(258.2조 → 309.5조)로 은행권 대출 증가율 11.3%(519.2조 → 578.1조)보다 빠르게 증가

■ '22년 자영업자 원리금상환비율(DSR) 추정치는 41.3%로, 자영업자는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

-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 DSR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금리인상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큼

&lt;기준금리 인상 시 DSR변화('21.Q2 대출잔액기준)&gt;

자료: 한국은행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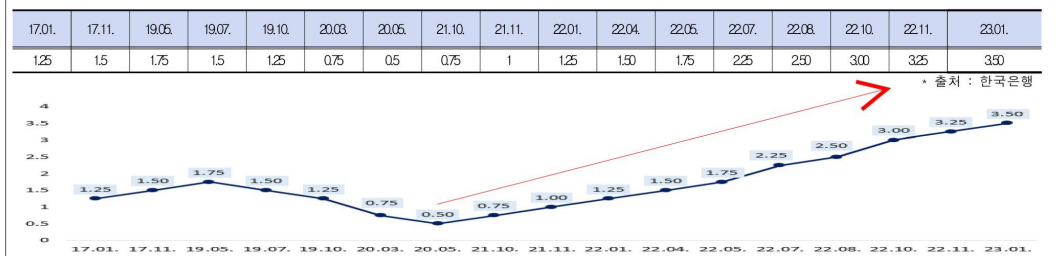
	1분위(저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고소득)	전체
a.기준금리	38.1%	45.6%	44.5%	39.2%	33.5%	37.8%
b.기준금리+25bp (b-a)	38.7% (0.6%)	46.1% (0.5%)	44.9% (0.4%)	39.6% (0.4%)	33.9% (0.4%)	38.3% (0.5%)
c.기준금리+50bp (c-a)	39.3% (1.2%)	46.6% (1.0%)	45.4% (0.9%)	40.0% (0.8%)	34.4% (0.9%)	38.7% (0.9%)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히 확대 공급했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우리나라 금리는 '21.8월부터 '23.1월간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0.5% → 3.50%)**

구분	20.5	21.8	21.11	22.1	22.4	22.5	22.7	22.8	22.10	22.11	23.1	23.2
%	0.5	0.75	1.00	1.25	1.50	1.75	2.25	2.50	3.00	3.25	3.50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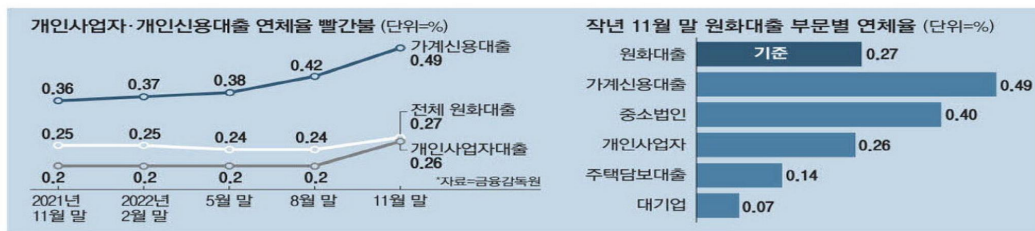
※ 3.5%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사상 처음

&lt;한국은행 기준금리 (2022~2023년)&gt;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금리 급등에 따른 연체율 상승 중

-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21.11월말(0.36%) VS '22.11월말 0.49%로 0.13%포인트 급등
-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금융지원(손실보전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안정적 관리 중
-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거나, 금리상승분에 대한 이자 유예 시행중



(출처:매일경제,2023.1.19. 이미지 기사자료.)

#### ■ 한국은행 역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22.4분기)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금리상승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르면 예상 **부실위험률은 비취약차주는 1.9%까지 취약차주는 1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특히 정책효과 소멸 시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
- 또한 **부실위험대출 규모를 추정해 보면, 취약차주는 15~17.1조원, 비취약차주는 16.1~19.7조원** 수준으로 분석
  - 아울러, 정책효과 소멸 시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9.5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정**
- 앞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정책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III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지원방안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선, 대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1조원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 ■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23.3월)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2억원
금리	연 5.5~7.0%, 고정금리	2년차 최대 5.5% 고정금리+보증료 연 1% 3~5년차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	보증료율 매년 1% → 3년간 0.7%로 인하
지원 대상	①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② 소상공인 ③ 연체없이 성실상환 중 ④ 비은행권 ⑤ 적용금리 7.0% 이상 ⑥ 사업자 대출 ⑦ 2022년 5월 31일 이전 대출	① 코로나19 피해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③ 정상차주 ④ 은행·비은행권 ⑤ 금리 7% 이상 ⑥ 사업자 대출 ⑦ 2022년 5월 31일 이전 대출	① 전체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③ 정상차주 ④ 은행·비은행권 ⑤ 금리 7% 이상 ⑥ 사업자 대출 ⑦ 2022년 5월 31일 이전 대출

#### ■ 정부 금융 프로그램의 문제점

-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출 및 대환 프로그램 기준 설계로 정책 금융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대상을 사업자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대표자 명의의 대출(가계)까지 포함해야 함.
- 23.1말 기준, 낮은 대환대출전환율(2.8%), 대출발기금(8.47%) 등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 IV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현황 관련 FGI 결과

구분		호프집		노래방		음식점		PC방		숙박업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코로나19 이전(2019)	포스트 코로나(2023)
매출금액(월기준)		4,500만원	3,200만원	1,500만원	1,300만원	3,5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2,700만원	2600만원	1660만원
영업이익(월 기준)		900만원	480만원	800만원	400~500만원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944만원	-200만원
대출금액		없음	5,000만원	없음	9,000만원 (정책대출)	없음	2,000만원 (정책대출) 3,000만원 (카드론)	2,000만원 (일반대출)	2,000만원 (일반대출) 1,000만원 (정책대출)	없음	없음
지출 금액 (월기준)	총액	약3,600만원	약2,720만원	약700만원	약800~900만원	약28,000만원	약14,000만원	약1,500만원	약2,100만원	약1,650만원	약1,860만원
	임대료 (관리비포함)	620만원	650만원	180만원	18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없음	없음
	원자재비	1,440만원	1,120만원	신곡비 : 100만원	신곡비 : 100만원	1,400만원	600~700만원	계임비 : 600~700만원 상품매입비 : 100만원	계임비 : 600~700만원 상품매입비(음식) : 300~400만원	비품 : 80만원 세탁비 : 90만원	비품 : 80만원 세탁비 : 90만원
	공 전기료	100만원	10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120만원	156만원	100만원	150만원	90만원	130만원
	과 가스비		X	X	X			X	120만원	210만원	
	수도세	700만원	4~5만원	4~5만원	13~14만원	17~18만원	6~7만원	15만원	90만원	100만원	
	인건비 (4대보험 포함)	1,000만원	250만원	350만원	270만원	320만원	300만원	500만원	720만원	810만원	
	기타잡비	통신비, 세스코 캠퍼스정수기, 인터넷, 전화, 화재보험 등 : 220만원	통신비, 세스코 캠퍼스, 정수기, 인터넷, 전화, 화재보험 등 : 220만원	통신비, 포스비, 화재보험 등 : 150만원	통신비, 포스비, 화재보험 등 : 150만원		수리 및 부품비 : 100만원 정수기 : 4만원	수리 및 부품비 : 100만원 정수기 : 4만원	수리 및 부품비 : 100만원 정수기 : 4만원 방향제, 인덱션, 초음파세척기 등 : 60만원	광고비 및 수수료(야놀자, 여기어때) : 400만원 통신비 : 36만원	광고비 및 수수료(야놀자, 여기어때) : 400만원 통신비 : 36만원



의견  
정리

1. 현황 및 문제점
  - (매출금액) 포스트코로나 시대인 현재 매출금액은 업종별로 다른 추세가 나타났으나, 모든 업종에서 코로나19 전 매출금액 대비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다만, PC방의 경우, 최근 PC방 내 음식섭취 문화 확산으로 인해 음식 관련 매출금액 및 원재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PC이용료로 인한 매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래방 및 음식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기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음식 문화(2차 문화, 음주시간 등)가 다소 변한 부분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영업이익 및 지출비용) 매출금액은 코로나19 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임대료, 광고료, 공과금 등의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되거나 증가하여 영업이익률 감소
    - 지출비용과 관련하여 PC방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환기 및 소독의 강제로 인해 세스코, 공기청정기 등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으며, 최근 1회용품 사용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초음파세척기 렌탈을 진행
    - 24시간 운영을 하는 PC방, 숙박업에서 공과금(전기세, 가스비 등)의 증가가 확연히 나타남
    - 호프점은 구인난 및 근로시간 준수 등의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운영시간을 약 4시간 줄여 운영하여 공과금의 큰 변동이 없음
  - (대출 및 이자비용 부담 증가) 코로나19 이후 대출의 증가 및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을 토로
    - 호프, 노래방, 음식점 등 업종에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출이 없다가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을 거치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였고, PC방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추가대출을 진행함
    -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정책자금 등의 초반 3~4% 이자율이 7~8%로 증가함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 호소
2. 개선사항
  - (공과금 부담 완화) ①가스요금 및 전기비 등 공과금 인상 자체, ②숙박업, PC방, 음식점업 등과 같이 영업을 위해 전기 및 가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에너지부담비 지원 필요
  - (고정비용 지원)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임대료 및 광고료 등의 고정비용은 유지 또는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후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의 지원 및 관련 법안 마련 필요
  - (정책자금 금리 인상 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임에도 변동금리를 적용,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 부담 극심  
-> 정책자금에 대해 고정금리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필요

## V 소상공인 금융 위기 극복방안 제안

### 1.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등 경영위기 상황을 대비한 『소상공인 희망(도약) 적금(가칭)』

- 소상공인들이 3년간 매월 사업소득을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정부의 예산 및 사회적 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구 분	금 액			비 고
소상공인 저축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희망지원금은 정부와 민간후원으로 지원
희망지원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적립금(2년)	480만원 + 이자	48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매월 적립방식
적립금(3년)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2160만원 + 이자	

- 지원대상 : 중~저소득층(1~3분위) 소상공인
- 지원비율 : 소상공인 50%, 정부 및 민간 후원금 50%(희망지원금 재원 정부 60%, 민간(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40%)
- 저축 방법 및 개설: 매월 자동이체, 직접 납입, 시중은행
- 저축기간 :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선택 가능
- 유사사례 : 경기도 청년적금,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고금리), 청년도약계좌(5년->70만원 납입->5,000만원) 등

## 2.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고정금리 적용, 절차 간소화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홍보로 금융지원

- 소상공인연합회 FGI 결과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고정금리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 (노래방) 2% 초반 대였던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는 4% 후반대까지 두 배 이상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큼. 물론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4대은행이 지난해 얻은 이자 이익만 30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읽으면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은행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걱정 없이 사업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언론에서 10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안보다 대출 금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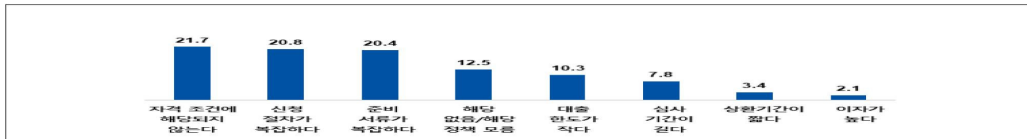
- 4대은행의 영업이익 및 언론에서 이야기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금을 금리 인하에 적용하여 소상공인 부담완화

- 또한 지난해 연합회가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채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애로사항으로

- 신청절차가 복잡하다(20.8%), 준비서류가 복잡하다(20.4%)로 41.2%가 복잡한 절차에 대해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정책 애로사항(중복응답)

[Base : 전체(n=1,000), 단위 : %]



- 지원절차 간소화 시 정책자금 이용률 제고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 가능

- 같은 조사에서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률'에 대해서는

- '알고 있다'가 28.7%, '이용 소상공인'은 0.8%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은 홍보 미흡인 것으로 보임

-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고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유도 필요

## 3. 비용절감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정책 방안 마련

- FGI결과 고정비용 증가가 영업이익을 감소의 큰 원인으로 답하며 고정비용 지원 및 관련 법안 마련 요청

■ (PC방) 코로나19 이후 환기 및 소독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선택의 중요 요소가 되면서 세스코,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 금지법 시행으로 초음파 세척기 렌탈을 진행하여 고정비 지출이 늘어남. 이렇게 고정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소상공인이 벌어가는 이익은 줄어들게 됨

■ (숙박업) 숙박업은 손님이 없더라도 전기·가스 등을 계속 사용하여야 해서 고정비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최근에 전기료도 90만 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르고 가스비는 1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라 정말 깜짝 놀랐음. 매서운 겨울 한파에도 최대한 사용량을 줄였는데 노력이 무색하게 요금은 급상승해 허탈함을 넘어 슬펐음.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책 및 지원법안을 꼭 마련해 주었으면 함

- 임대료: 코로나 기간부터 적용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추진 시 소상공인 임대인에 한해 세액공제 기준 확대\*를 통한 참여율 제고 (\*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 90%로 확대하여 세액공제)

- 인건비: 소상공인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소상공인 행복고용지원금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지원

-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일자리 연속성을 유지

구분	소상공인 행복고용지원금		
대상	매출감소 50%이상 소상공인과 종사자	매출감소 30%~50%이상 소상공인과 종사자	매출감소 1%~30%이하 소상공인과 종사자
기간	최장 12개월	최장 9개월	최장 6개월
지원방식	최저임금 50%지원(매달 지급)	최저임금 30%지원(매달 지급)	최저임금 15%지원(매달 지급)
비고	① 추가적인 중복지원 불가 ② 종사자는 퇴직 시 수혜 제도 박탈		

- 공과금: 최근 가스 및 전기요금 급등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노후전등 LED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환경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지원

- 저효율(월41.4kwh)제품을 고효율(월26.3kwh) 제품으로 교체 시 **최대 36%의 에너지 절감효과** 가능  
→ 또한 노후 보일러 교체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 추정**(환경산업기술원)
- (해외사례) 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최대 4,000달러(약 490만원) 지원.  
② 독일은 '23년~'26년까지 총563억 유로(약76조4,000억)를 투입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지원  
③ 네덜란드도 2030년까지 총250만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사업 진행

#### 4.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 연합회 FGI결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기 해결책은 매출증대**라고 답변

■ (호프집) 코로나 이후 월매출이 30%정도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절반(월900만원 → 월480만원)으로 감소하여 결국 정규직 1명을 감원. 어떻게든 사업은 유지해야해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매출은 줄어드는데 최근 물가도 계속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큰 부담. **대출도 결국은 빚이고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야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

- IMF, OECD 등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화 기반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 주장**  
-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4.4% 완화**한다고 보고(IMF Working Paper, 2022)

#### 5. 소상공인 금융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 금융권에 지급하고 있는 보증수수료 감면 및 우대 수수료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긴급대출 상품 출시(제1금융권)
- 대출 심사 평가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제도 도입
- 소상공인 관련 세금 감면 및 유예



토론 3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민병덕 국회의원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민병덕 국회의원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민생투사 #민생회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

- ✓ 기준금리 상승을 이유로 한 은행의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
- ✓ 대출이자 속에 은행이 부당하게 전가하는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 배제, 환수
- ✓ 자영업자 부채 완화 대책 마련

#민생투사 #민생회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





##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memo

[illegible]


제2차 금융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성주·민병덕·박주민·신동근·양경숙·오기형·이동주